

지수 제자리 걸음, 투자자는 이탈... 코스닥, 갈 길을 잃었다

코스피 79% 뛰는데 코스닥은 0.64% 지수, 출범 당시 수준에도 못 미쳐 업종 편중·높은 변동성 등 원인 우량기업 육성, 부실기업 퇴출 절실



ChatGPT로 생성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닥지수' 관련 이미지.

작정인 박모(37)씨는 요즘 코스닥의 '요'지만 들어도 화가 치솟는다. 저조한 투자 성적 때문이다. 올해 수차례에 걸쳐 알테오젠·에코프로비엠 같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5000만원가량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회복하거나 하락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8%로 곤두박질했다. 박씨는 "지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해 수익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코스피의 열기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까지 번지지 않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연초(지난 2일) 대비 약 79.38% 오르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945.57에서 951.63으로 0.64% 올랐다. 자금 흐름을 봐도 올해 들어 코스피의 평균 일일 거래대금은 34조원에 달하지만, 코스닥은 14조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조인인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

며 코스닥의 상대 성과가 둔화했다"면서 "코스닥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 R)은 27.4배로 10년 평균 17배에 비해 부담이 커진 상황이며 코스피의 8배와 비교해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은 2005년 대비 시가총액이 15배로 늘었다. 하지만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1000)를 여전히 밑돈다. 부진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면과 특정 업종에 치우친 편중성, 그로 인한 높은 변동성 등이 꼽힌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코스닥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도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같은 초우량기업

이 지수를 견인한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에 있던 우량주들이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코스피로 옮겨가는 '엑소더스'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지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낮추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체질 개선 강화에 기대를 건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상장사 인턴스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한 바 있다. 인턴스가 교환사채(EB) 발행 과정에서 주가 상

승을 제한할 수 있는 콜옵션매수 청구권)을 설정해 주가를 누를 유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이다. 사실상 공매도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인턴스 관련 발언은 정부의 코스닥시장 체질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다. 코스닥 상폐 시가총액 기준이 현재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에 오른다. 이르면 10월부터 코스닥 승강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총 3개 리그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우량기업은 키우고 좀비기업은 쉼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2차 국민성장펀드라는 코스닥 자금줄도 있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정책자금 가운데 약 8조원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 직접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프라·대출 등 간접 지원 효과까지 포함하면 (코스닥 유입 자금은) 5년 누적 약 10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전통적으로 개인 중심의 시장이었던 코스닥에 외국인·기관 참여가 확대되면서 투자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도 유동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프리미엄지수 출범과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참여 확대도 코스닥시장 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이는 점도 시장 활성화 기대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이 'MIDAS 코스닥 액티브', 신한자산운용이 'SOL 코스닥 TO P10' 등을 내놓았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지난 2일 'TIGER 코스닥액티브'를 상장했다. 이외에도 타임폴리오의 'TIME 코스닥액티브',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 Act 코스닥액티브', 한화자산운용의 'PL US 코스닥150액티브' 등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기업들은 가시적인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저평가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에는 기업의 성장이나 정부의 지원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거래소, 복수의결권 기업 상장 규정 신설

창업자 보유 주식에 최대 10개 의결권 의결권 기준 실질 지배자 판단 위한 규정

한국거래소는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에 대비한 규정을 신설한다.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 지배자 기준을 정의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에서 제외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을 합산해 가장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를 최대의결권자로 규정한다. 벤처금융이 최대의결권자인 경우 벤처금융과 경영 미참여자는 최대의결권자에서 제외한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2023년 11월 도입했다. 100억원 이상의 외부 투자로 창업자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이 적더라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주식 수와 의결권 비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액화수소 벤처인 하이리움산업과 물류 벤처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소수 업체가 채택하고 있다. 이 중 하이리움산업이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밟게 되자, 단순히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를 실질 지배자로 보는 현행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한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은 없다.

한국거래소는 또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을 선정해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기준을 함께 마련했다.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낸다는 취지로,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2개 연속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외)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저PBR기업'으로 선정해 공표할 수 있다. 관련 업종 분류와 PBR 선정 기준, 공표 방법은 거래소가 정한다.

의의가 없을 경우 이런 개정안은 내달 2일 시행된다.

/신하은 기자

"韓증시 저평가 여전... 기업가치 제고 필요"

보스턴컨설팅그룹 보고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 여전히 낮아 자본 효율성 높이고 주주환원 강화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넘어서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는 아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수 상승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10일 발표한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한국 저PBR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사들의 총주주수익률(TSR)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는 2024년 말 2400선에서 2025년 말 4200선, 올해 5월에는 8000선을 돌파하며 약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상승했다. BCG는 이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방산·조선원전 등 주도 업종의 실적 개선 및 밸류에이션 확대 영향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만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가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말 기준 1.4배, 올해 말 예상치 기준 1.9배로 미국(4.9배), 대만(4.0배), 인도(2.8배)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방산·조선원전 등 주요 업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예상 PBR은 1.0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삼성운용, 중퇴기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30년 8월까지 운용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성평가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삼성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자산운용의 운용 전문성과 1기 성과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나타냈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이 통합 운영하는 국내 대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전문 운용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가 강점이다. 특히 운용 여력이 부족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자산운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제도 도입 후 맡아온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의 역할을 이어나가며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세부 협의 거쳐 9월 1일부터 기금을 본격 운용할 계획이며, 운용기간은 2030년 8월 말까지다.

삼성자산운용은 중퇴기금의 첫 전담운

/신하은 기자

용기관으로서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마케팅, 정책지원 등 기금운용 전 영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가입자 확대와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차기 사업기간에는 중퇴기금의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며 전담운용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도입돼 배달라이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및 회사 부담 퇴직연금이 없는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6.25참전유공자회 영등포지구지회에서 열린 기부 행사에서 홍원식 대표이사 사장(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증권

LS증권, 국가유공자 가정에 따뜻한 나눔

식료품·생필품 등 전달

LS증권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6·25참전유공자회 영등포지구지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호가족을 위한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지역사회

회 내 보호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LS증권은 식료품과 생필품 등 기부 물품을 6·25참전유공자회 영등포지구지회에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등 보호가족에 전달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